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시스템 발전방안 정책포럼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출채권유동화(합성CLO), 기술가치보험, 이차(利差)보전 등 새로운 정책대안이 소개되었다.

'07.6.28(목) 15:00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최, 산업자원부·우리은행·기술보증기금 후원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금융시스템 발전방안' 정책포럼이 개최되었다.

본 포럼에는 산자부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성철 원장, 우리은행 송기진 부행장, 기술보증기금 이남형 이사를 비롯한 학계, 금융기관, 기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주제발표 :

- 「유럽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의 사례와 시사점」 서울대 이창용 교수
-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활성화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승일 박사
- 「기술평가시스템 개선 및 기술가치보험 도입방안」 서강대 남주하 교수
- 「신바젤 도입이 기술금융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연세대 손소영 교수

산업자원부 김용근 산업정책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간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고가 산업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술혁신 전과정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금융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서울대 이창용 교수는 「유럽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의 사례와 정책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의 경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정부에 의한 직접 지원방식 대신, 민간금융기관을 활용하되, 정부가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이 시장을 이용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승일 박사는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중은행의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대출에 내재된 신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 독일·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출채권 유동화방식' 과, '이차(利差)보전방식' 을 제시하였다.

- ※ 대출채권유동화(CLO) :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자산을 보유하면서, 신용위험만을 유동화증권을 통해 시장 투자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
- ※ 이차(利差)보전방식 :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적정 수익률을 보전

서강대 남주하 교수는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가치보험제도를 소개하였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가입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정책보험제도



로써,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가 책임과 위험분산의 원칙을 지키면서, 기업의 부도시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소유권을 기업이 갖게 함으로써, 기술력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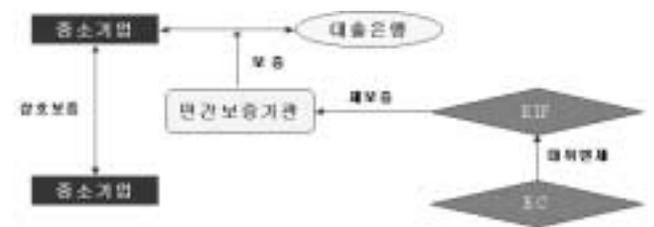
연세대 손소영 교수는 新바젤 도입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른 자금조달 양극화가 심화되어, 기술금융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기술력 중심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모형의 구축과, 전문적인 기술평가기관 육성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산자부는 본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대안들의 도입타당성에 대해 관계기관 등과 검토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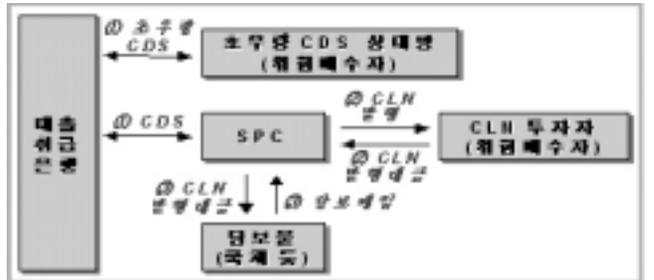
유럽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서울대학교 이창용 교수)

- EU 중소기업 정책목표가 ‘고용’에서 ‘혁신(Innovation)’으로 전환되었으며,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수단은 금융지원
- 금융지원의 대원칙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최소화로서, 특정분야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피하고, 민간 금융기관을 지원하되 정부가 위험을 공유하는 방식을 취함
- 시장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기업의 위험이 시장에서 적절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 개선
- 간접지원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며, 최종수혜자인 중소기업이 자신의 대출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인지를 인지할 수 없도록 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이 발전한 현상황에서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시장을 이용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서의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EIF의 대출보증사업 〉



시중은행의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승일 박사)



- 최근 시중은행에서 기술평가에 기반한 대출상품이 도입되고 있으나, 높은 신용위험, 정책금융과의 금리차등으로 대출실적 저조
-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 필요
- (1안) 기술금융 대출자산의 유동화
(예 : 유럽투자기금(EIF), 독일부흥공사(Kfw), 일본중소기업금융공고 등)
- 금융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을 보유한 가운데 신용위험만을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복합신용파생상품
 -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대출의 신용위험을 일차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개선
 - 정부도 인수한 신용위험을 투자자들에게 전액 이전하기



때문에 제도운용에 따른 재정손실 가능성은 미미

(2안) 利差보전방식의 도입

- 금융기관이 기술력 우수기업에 대한 대출취급시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
-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기술혁신형 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대출활성화 유도

신바젤 도입에 따른 기술금융 영향 및 대응방안

(연세대 손소영 교수)

□ 新BIS 도입으로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자금조달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여, 기술혁신형 기업 대출 위축 초래

- 新BIS 기준에 입각하여 기술력 중심기업의 대출포트폴리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함

※ 바젤I 에서 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위험가중치가 적용되나, 바젤II는 차주의 신용도의 따른 위험가중치 차등화

□ 기술신용평가모형(기보)의 경우 4,090건의 기술기업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구축되어 10개(AAA~D)의 기술등급으로 구분

- AAA의 경우 부도확률이 1.4%로 기술등급 우수기업의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낮출 수 있음

□ 신바젤 협약에 따른 기술금융 위축에 대비한 정책수립이 필요

기술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부도확률(%)	1.5	4.2	6.1	9.4	12.7	16.0	20.1	27.4	32.4	50.4
자기자본율(%)	4.3	8.1	10.1	13.7	17.2	20.5	24.7	31.5	36.0	51.1

- 기술중심 중소기업에 대한 부도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 모형의 구축이 필요
-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평가기관

및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

기술평가시스템 발전 및 기술가치보험 도입방안

(서강대 남주하 교수)

□ 기술가치보험제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후 보험가입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정책보험제도

- 보험원리에 따라, 정부, 금융기관 및 기업이 책임과 위험분산의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 기술가치를 담보로 보증을 제공하고 유사시 기술가치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는 기존의 제도 대신,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보증자의 대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현행 기술보증제도는 기업 부도시 보증기관의 구상권 발생으로 인해 기업의 기술력이 채무보전수단으로 사용되어 기업의 기술력이 사장되는 문제 발생

- 즉 기업이 기술가치보험 가입으로 부도가 나더라도 기존의 불입한 보험료로 손실을 보전하고 기술력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여 부도로부터 회생기회를 갖게됨.

-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기 위해 정책보험기관이 지불한 손실보전에 대해서는 기업이 회생한 후 장기간에 걸쳐 사후적으로 회수

